

이 봄의 교육대란을 바라보며

곧 발표되리라던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은 소문만 무성한 채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개혁방안을 양산해 내고 있고, 신문들은 연일 이를 특종처럼 보도하기에 바쁘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방안들이 아직은 이런 아이디어도 있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든지 하는 원칙적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로스쿨 방안처럼 정부의 법조개혁 추진계획에 각 대학이 급조된 계획들을 서둘러 매스컴에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제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본고사를 치를지, 과목은 무엇을 할지, 배점은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전 교육개혁이나 교육개선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며 낮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욱이 금년 가을에 치러질 수능시험과 내년 초의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실은 정말 교육대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개혁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정부에서 발표할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이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혁안의 목적이나 내용이 대학 입시 위주의 잘못된 중등교육을 바로 잡고,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지향하며,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대학마다 특성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것들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가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초점을 규제의 완화 정도에 맞추고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정부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번의 교육개혁정책을 통해서도 대학의 탈바꿈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개혁방안들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별로 나올 것이 없는 것 같다. 학생들은 아직도 등록금 인상률이나 특정 교과목 개설과 강사 선정권 등을 놓고 발목을 붙드는 상황이 변한 게 없는 데다가 학문의 새로운 추세나 사회의 수요는 아랑곳 않고 자기과목, 자기학과나 교과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교수들의 고정관념에 변화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의 전망을 보고 진학분야를 찾으려는 기색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경희대 총장 공 영 일

눈에 띄이지 않는다. 환경이 변한 게 있다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1996년부터 대학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대학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막연한 염려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 정도일 것이다.

개혁의 목적이 불명하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아직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개혁을 서두른다면 새로 나온 개혁방안 역시 누적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 하나를 덧붙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고,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위한 교육개혁이 이 사회가 당면한, 연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요청이라면 다음 몇 가지가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각 대학 스스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학이 개혁주도세력으로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올바른 개혁의 목표를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추진하는 교육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의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희생자였는가를 식별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그들은 이 나라의 청소년이며 또 그 학부모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도 그 2차적인 희생자였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문제를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새 시대의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답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공교육비 역시 대학입시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낭비되고 있거나 낭비되어 온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토양과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대학의 개혁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화려한 구호나 설익은 계획안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혁의 주체인 우리 대학이 먼저 오늘의 현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기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되새겨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